

# 4·19에서 86세대·촛불로 이어진 장기혁명 세대를 넘은 '단속적(斷續的) 계승혁명'

---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전공

wblee@aks.ac.kr

---

- I. 머리말: 1960년 봄 민주화운동이 불을 당긴 한국 「60년 혁명」
  - II. 지역에서 생활인들이 점화한 4·19혁명과 그 반동으로서의  
5·16 군사 정변
  - III. '비조직 민중'과 촛불
  - IV. 세대와 혁명
  - V. 386의 장기집권
  - VI. 2020년대에는 촛불세대로 교체될까?
  - VII. 30년 세대론의 계보
  - VIII. 맺음말
-

## I. 머리말: 1960년 봄 민주화운동이 불을 당긴 한국 「60년 혁명」

---

이 연구는 혁명론과 세대론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4·19혁명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2000년 이후 촛불시위 등 한국혁명사의 이어진 사례들을 문헌에 의존해 연결시키는 사례연구이다.

1960년 봄 4·19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지지했던 농민과 생활인들 중 일부는 박정희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보수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1967년 대선에서 다시 박정희를 선택했다. 삼선개헌에 이은 197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를 또다시 선택한 민중의 일부는 세 번째로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

1972년 파쇼화한 종신 대통령 박정희의 폭압적인 통치에 대응하기 위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60년대 진달래 정치혁명주체보다 새로운 연배(年輩)인 1970년대 유신체제변혁[반유신독재민주화투쟁] 주체가 전면에 등장했다. 1970년대 후반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이은 부마항쟁은 박정희 시해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세력이 쟁취한 우회적 결과물인 1980년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감행한 광주학살(5·18쿠데타)로 인해 종식되었다. 확고한 지도부의 결여와 플랜 미비로 일어난 해프닝인 1980년 5월 15일의 ‘서울역회군’으로 인해 신군부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5·17반동만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광주학살을 주도해 등장한 전두환 파쇼체제(유신체제의 후신으로서의 신유신-신군부반동체제) 아래서 1981년 이후 혁명운동세대(386)가 학생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출범 당시에는 286세대). 286세대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주도해 4·19정신-1970년대 민주화운동정신을 선택적으

로 계승하면서도 사회운동의 방법론은 개량주의에서 혁명주의로 변화시켰다. 1981-1983년 운동권 주류 이념이 '낭만적 리버럴리즘(자유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맑시즘)' 등으로 넘어가면서 세대 또한 교체될 조짐을 보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386이라고 명명된 혁명운동세대는 뉴밀레니움 시대인 21세기 초 전후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개혁세력의 근간이 되었다. 이어 2002년, 2004년, 2008년 촛불시위에 이은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386의 느슨한 지도력 [투쟁의 장 마련] 아래 있던 촛불세대가 박근혜퇴진운동(촛불혁명)의 주요 동력[소장층이 주축이었지만 기성세대도 참여했고 노장층도 일부 가세]이 되었다. '20-50대가 연합'하는 '촛불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근 6개월 간 총 1,700만<sup>3</sup>의 비조직 민중<sup>4</sup>이 광장에 나와서 요구한 대통령 퇴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도 탄핵이라는 결실을 맺는 혁명적 결과를 쟁취했던 것이다. 2016년 10월 29일 대규모 시위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어(1차집회) 2017년 4월 29일(23차집회)까지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사퇴 등을 목표로 한 사회운동이었다. 언론에서는 촛불을 들고 참여해 촛불집회라고도 한다. 집회시위의 경우

- 
- 1 Hyeon Woo Lee, "Political Implication of Candle 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40 no. 3 (2009), pp. 495-526.
  - 2 이세영,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눈, 86세대와 청년이 다른 이유」, 《한겨레》, 2019년 10월 29일자(www.hani.co.kr,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 3 정현목, 「미완 혹은 진행 중인 혁명: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8), 319쪽.
  - 4 안병욱, 「'촛불혁명'과 세계의 혁명사」,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7), 2쪽.

초기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주최했으나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나갔으며 그 중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운동이 성공해 박근혜를 퇴진시켰다는 점에서 '촛불혁명(Candlelight Revolution)'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촛불이 혁명인지 시위인지 아니면 항쟁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는 후대의 역사가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촛불[시민(민중)명예혁명]'이라고 시민이 주체인지 민중이 주체인지 괄호 속에 묶어서 잠정적인 형태로 포괄하고자 한다. 또한 백남기 농민 등이 사망했지만 본격적인 촛불시위국면에서는 본격적인 유혈사태가 없었으므로 명예혁명으로 잠정적으로 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 폭력사태 없이 무혈혁명급으로 성공했으므로 혁명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광의의 혁명은 새로운 [헌정 혹은 사회]체제(왕정의 공화제로의 변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변화)의 수립을 결과해야 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정치적 혁명(체제전복) 정의에 따르더라도 혁명은 헌정 질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진 체제전복 행위를 지칭한다. 그런데 박근혜 퇴진 운동은 헌정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 탄핵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이지만 헌정 질서를 뒤집자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체제수호적인 운동이었다. 혁명으로 보는 관점은 '헌법'이 아닌 '대통령'을 체제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시민운동으로 간주되는 6월항쟁은 항쟁 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로 군사정

권을 퇴진시키지는 못했고 연장시켰지만 새로운 헌정 체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는 체제를 바꾸지 않은 채 정권을 바꾼 박근혜 퇴진 운동보다 혁명성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과 '헌법' 중에 '체제'라는 단어와 더 유사한 것은 헌법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나 6월항쟁은 모두 혁명적 시민운동이지 혁명자체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체제변혁=혁명=헌정질서 밖에서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6월항쟁의 혁명성이 촛불시위보다 더 강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구태여 혁명과 결부시킨다면 명예혁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촛불을 구태여 혁명이라고 주장한다면 '시민'자를 삽입해 '촛불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해 시민운동의 성격도 내포하게 하는 안이 타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9년 7월 26일 수석직에서 물러나면서 '촛불명예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촛불시민명예혁명'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혁명성이 부족했다면 '촛불시민항쟁'이라는 명명도 방법이다. 한편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6월항쟁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지만 민주화를 대통령 직선제와 등치시키는 한계 안에 머물렀고, 이후 사회경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개혁에 머물렀지만 당시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사회경제 개혁을 추구하고 그 개혁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사회경제적 부문의 총체적 개혁에는 미흡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완전한 혁명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평가로 개혁추구적-현실적 시각에 비추어보면 혁명만능주의가 아닌가 한다.<sup>5</sup>

5 김민아, 「[커버스토리]민주화 주역서 권력 중심에 선 그들,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되다」, 《경향신문》, 2019년 9월 28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10월

촛불이 이끄는 반권위주의적 민주화 투쟁은 사전 계획이나 조직이 없었으면서도 수만명 군중이 대오를 형성해 억압세력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상대로 투쟁하면서도 난동이나 폭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과업(구체제양상연 레짐; 그러나 서구 ancient regime이 내포하는 신정-왕정은 아님) 타파를 통한 새로운 국가 및 사회 질서 수립 요구<sup>6)</sup>을 떠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정치에 진력하면서 촛불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혁피로감 때문에 또다시 반동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게 나라냐”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이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민의 기대와 응원은 컸다. 광장의 에너지는 쉬이 꺼지지 않고 높은 지지율로 연결됐으나<sup>7)</sup> 지지부진한 개혁과 가시적 성과의 부족, 보수주의자들의 결집, 2019년 여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인해 지지율은 하락했다. 약속 준수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이를 수렴하고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촛불의 주도세력이 아니었다. 정치권(국회)은 언론과 촛불 시민들의 주도로 대통령 탄핵안을 떠밀려 통과시켰던 것이다. 촛불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혁명의 과실만을 누린 것(과장하면 무임승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2020년 4·15총선 국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4·19의 주체가 아닌 민주당이 혁명 후 정부 구성 과정에 무임승차해 정쟁에만

---

6일).

- 6 이현환, 「전환기의 보훈 정책: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학술토론회(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 2019년 4월 1일.
- 7 김중일·이민우, 「만사총통④」 ‘이건 나라냐’ 실망이 지지율 하락세 핵심」, 『시사저널』 1526(www.sisajournal.com, 검색일: 2019년 6월 6일).

몰두하다가 몰락한 것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1960년 봄부터 2017년까지, 게다가 2020년에도 거리의 정치가 지속되었으므로 근 60년간 한국정치의 혁명적 변동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혁명을 세대론에 비추어 조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한국혁명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의 혁명을 이어진 것이 아닌 별개의 사례로 보았다. 또한 세대론과 연결시킨 것도 역시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비조직 민중에 의한 계속혁명, 세대간에 이어진 계승혁명'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지역에서 생활인들이 점화한 4·19혁명과 그 반동으로서의 5·16군사정변

### 1. 지역에서 생활인들이 점화한 4·19혁명

자유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신병 치료를 위해 도미를 하게 된 것을 기회로 1960년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인 정·부통령 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부는 장면 민주당 후보의 대구 유세에 대한 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2월 28일 일요일 등교를 지시했다. 대구 지역 고교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회를 가졌다. 이 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고등학생들의 전국적인 반정부 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3월 15일 부정선거는 자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4·19는 서울의 대학생들이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앞장선 것이다.

경남 마산에서는 3월 15일 개표 전후 '선거무효'를 외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마산상고 김주열 군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김주열 사진이 도화선이 되어 2차 마산 시위가 벌어지면서 반정부 투쟁이 4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4·19의 도화선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아니라 마산의거가 제공했으며 마산의 시민들과 고등학생들이 선봉에 섰던 것이다.

이반된 민심은 2·28대구민주의거와 3·15마산의거가 극명하게 반영했으나 이승만 체제는 이를 인정해 포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을 폭도로, 시위는 '공산당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가는 언론조작을 자행해 민심을 더 동요시켰으며 진압에만 급급해 결국 4·19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4·19의 초기양상은 기존의 통설처럼 4·19서울[대]학생혁명이 아니라 '1960년 봄 지역사회시민운동'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19의 초기 원류와 기원에 주목해 지역중심적 성격과 자연발생적이고 시민운동적인 의거의 성격에 주목했다. 이는 단선론적인 기존의 성격규명에다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해석을 가미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해석에 주목한다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앙중심적 해석도 일정 부분 지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200여 명의 대구지역 2·28 고등학생시위, 1만여 명이 참여했던 3·15 마산의거, 2만여 명이 참여했던 4·11 2차 마산의거 등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4월 18일 고려대생의 대규모(4천여 명에 달함) 시위가 거의 처음이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대학생 시위만을 대표하는 4·19혁명이라는 명칭은 '1960년 봄의 전국적 사회운동'(진달래정치혁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개



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4월 19일 유혈이 난무하자 비교적 소규모의 운동들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므로 그날의 역사적 계기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4·19라는 명칭이 가지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제언은 현재로서는 단지 보완적인 차원에 불과한 면이 있다.

1960년 2·28 대구민주운동과 3·15와 4·11 양차에 걸친 마산의거 등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4·19의 결과로 4월 26일 이승만이 물러나자 당시 데모를 주도했던 학생시위대는 성취감에 들떠 비교적 만족했다.

1960년 봄 대구-대전-마산 등 지역(지방)에서 학생과 기층민중(생활인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을 점화했다. 그해 4월 '진달래정치혁명(정권타도)'에 성공한 생활인들은 각자의 생업 현장으로 복귀했다. 거사 당시에는 학생-민중이 주체로 나섰으며 정치인들은 비교적 뒷전에 물러있던 상태에서 혁명의 1차적 목표인 '독재정권 타도'가 달성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사회질서 창출이 요구되는 포괄적 사회혁명과 달리 '정권타도'만으로도 혁명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정치혁명'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필자는 기존에 4·19혁명이라고 규정된 사건이 신체제 창출에는 실패했으므로 혁명보다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역사적 통념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진달래정치혁명으로 적고자 한다.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운동에는 다양한 '집단행동(또는 집합행동, collective behavior)'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발생적이며 자발적인 봉기와 의거도 당연히 사회운동에 포함된다. 정권에 항의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봉기(의거)가 의도한 바를 넘어서서 정권타도를 결과했으므로 정치혁명으로 발전했던 것이 바로 '1960년 봄 사회운동'이었다. 4·19혁명은 서울 중심, 대학생 중심의 편향성을 내포한 용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1960년 봄 사회운동'은 4·19 이전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생-노동자 등 기층민중이 그 불을 당긴 사회운동이었다.

## 2.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의 수립: 4·19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5·16군사정변

1960년 봄 혁명의 과업을 대신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원 등 정치인들은 반이승만 연합전선(coalition)의 구성원이었을 뿐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직접적 주체는 아니었으므로 정치혁명을 넘어선 사회혁명과업을 담당하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명백했다. '진달래정치혁명'의 주체였던 생활인들은 상처받고 다시 시위에 나섰다. 정치인들의 파벌투쟁이 더해져 정국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고 장면 정부의 리더십은 불안해 보였다.

'사회혼란'이라는 조작된 명분으로 1961년 '5월반동'을 결행한 군인들의 반기득권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 일부 생활인들은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좌익전력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는 미국을 의식해 《민족일보》의 조용수 등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황태성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생활인들은 양대선거에서도 연좌제 폐지와 진보인사 사면을 내건 박정희와 공화당을 다시 지지했다. 그러나 민중들은 배반당했다.

1960년 4월 26일 이후 13개월간 새 국면 속에서 큰 기대를 했던 시위주체들은 민주당의 분열, 무능과 부패에 좌절감을 맛보았다. 학생-시민들이 흘린 피의 수혜자가 되어 무임승차<sup>8</sup>해 혁명(새로운 사회[헌정]체제 수립)의

---

8 당시 기자였던 고정훈은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학생대열에 묻어 들어가 밤낮으로 쏘다니는 동안 민주당의 주요 간부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 1991), 75쪽. 이러한 무임승차론에 대해 김대중은 1960년 4월 6일 민주당이 주도했던 시위가 있었으며 이것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제2공화국과 장면: 김 대통령 특별회고 上」, 《대한매일》, 1999년 6월 11일자, 6면;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과제를 위임받았던 민주당 정부는 혁명의 계승자(계속수행주체)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5·16군사쿠데타[정변]는 그 좌절감을 이용함으로써 성공했던 측면이 있다. 군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구정치인 중심]을 뒤집어엎는 혁명을 했다고 자신들의 불법 정변을 합리화했으며 사회 일각에서도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정치권의 한 축이었던 혁신세력들도 역시 [보수정치권과 같이] 무임승차했으면서도 선거에서 실패한 후 데모정국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졌으나 결국 민심을 수렴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4·19의 시대적 과제를 5·16 주체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측면이 있었다. 5·16 주체인 군부는 혁명재판을 통해 3·15부정선거 주도세력 등 구악 추방과 부정축재자 처벌에 나섰던 것이다.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체제로 대치”라는 포괄적 사회혁명의 시각에서 보면 4·19는 미완의 혁명<sup>9</sup>이었고 [왕조시대의 역성혁명을 연상시키는] 단순한 정권교체에 불과했으므로 정치혁명의 범주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 4·19혁명의 주도세력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활인들(비정치인)]’이었으나 혁명 이후의 혁명과업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괴리가 생기고 사회혁명의 과제는 미완으로 그쳤던 것이다. 미국의 사회과학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에 따르면 [사회혁명뿐만 아니라: 인용자] 정치혁명의 경우도 정치권력의 교체 후 정치사회제도에 일관된 변화 계획이 추진된 경우만이 혁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양원제, 의원내각제 정부)를 수립했다지만 일관된 변화 계획

196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57-58쪽.

9 4·19 사회혁명의 과제가 5·16에 의해 짓밟히자 4·19가 미완의 혁명이었다는 평가가 더욱 힘을 얻었다. 서중석, 「다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신동아』, 2000년 4월(shindonga.donga.com, 검색일: 2019년 5월 27일).

10 “혁명,” 『나무위키』(namu.wiki/w/%ED%98%81%EB%AA%85, 검색일: 2019년 5월 30일).

추진이 지속되지 못했고 더욱이 5·16반동으로 이러한 체제마저도 구체제로 환원되었으므로 4·19혁명은 정치혁명이라고 해도 미완으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4·19는 자유당 보수정권에서 민주당 신보수정권으로 보수적 엘리트 간의 집권세력의 교체에 불과했다. 자유당 정권의 기초와 민주당 정권의 기초는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새로운 체제는 수립되지 못했으므로 사회운동(사회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보수정당이 지배하는 정국도 보수 정치인들 사이의 세력다툼 때문에 안정되지 못했다.

### Ⅲ. '비조직 민중'과 촛불

촛불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 통치 세력의 잘못된 정치행태(국정농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 촛불정신의 정치적 함의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니 핵심은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sup>11</sup>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꿔야 과거 모든 대통령이 겪은 불행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는 촛불정신도 있다. 따라서 촛불의 개혁정신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입법부에 넘겨주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해

---

11 「김진국이 만난 사람: 강대인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 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중앙SUNDAY》, 2019년 7월 13일-14일자, 10면.

균형을 하는 권력구조 개혁에 있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대통령이 과거 [친일]정권의 적폐를 과감하게 도려내주는 개혁을 원하기도 하는 2가지 모순적인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강력한 대통령의 개혁 수행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방향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느쪽 하나만을 택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쪽에서 저항할 것이므로 모순적 스탠스를 지양할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된다. 바른 대통령의 개혁 수행을 바른 국회가 견제해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문화가 이어져왔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와 같은 분권형이 그 리더십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은 당분간 어려울 듯하며, 다만 입법부가 현행 대통령제의 제왕성(독재성)을 견제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한다면 불신에 빠진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도 그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19와 6월항쟁, 촛불시위는 모두 비조직 민중이 동력이 되어 성취한 획기적이며 혁명적 사건이었다. 탄탄한 조직 없이도 성취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하지만 한국사에서는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에 의해 별도의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도 집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항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12</sup> 4·19와 5·18, 6월항쟁, 촛불시위 모두 그랬으므로 조직 면에서는 유사한 일종의 '시민[민중]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4·19혁명[민주의거]의 연장선에서

---

12 안병욱, 「'촛불혁명'과 세계의 혁명사」,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7), 2쪽.

혁명이 70년 가까이 3대에 걸쳐 간헐적으로(1대 4·19, 2대 6월항쟁, 3대 촛불혁명)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3세대 100년에 걸쳐 일어난 '장기(長期)혁명'인 프랑스혁명에 비견되는 '한국판 현대 장기(長期)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혁명은 그 주체가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이념[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다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과 조직적 특성[비조직 민중이라는 측면은 일관되나 6월항쟁의 경우는 운동조직이 다른 2개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정비되어 이끌었음]에서 완벽한 일관성은 없다. 따라서 비교적 일관적인 프랑스시민혁명과는 다소 다르다. 따라서 '단속적[선택적] 계승혁명'인 한국판 장기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한국현대혁명은 민주주의[회복이]라는 보편적 이념 면에서는 계승적이나 혁명의 주체는 세대교체를 이루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단속적(斷續的)이며 이슈와 구호 면에서도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혁명이라 함은 부르조아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같은 계급혁명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계급이 아닌 비조직 민중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민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닌 한 부르조아혁명과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부르조아혁명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되는 프랑스혁명과도 다른 결이 다른 '시민운동'으로서의 특수한 성격이 있다. 역사상 일어난 혁명들 중 불세비키혁명과 같이 강고한 조직이 뒷받침된 것이 다수는 아니며 자연발생적 항거가 증폭되어 시작된 것도 많으므로 우리의 비조직적 항쟁을 인류 보편의 경우로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직적이지 않았으므로 혁명의 주체가 모호했고 정권전복(4·19)이나 정권교체(촛불혁명)를 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혁명 후 과업을 완수할 주체는 정치인들에게 위탁해야 했고 새로운 체제를 쟁취한 사회혁명이 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정치혁명)'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세대와 혁명

---

한국현대사의 혁명적 사건에서 어느 특정한 계급만의 계급혁명은 없을 뿐더러 한 세대만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도 없다. 거의 모든 혁명에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참여했으므로 어느 특정 세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당시에 그 혁명의 기반으로서 동력을 제공한 당시대의 연배는 없지 않다. 4·19세대와 촛불세대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하다. 이 글은 혁명 기본세력으로서의 특정 세대를 분간해보려는 시도이다.

‘세대’라는 말은 시간, 노화과정, 연령집단, 사회구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되는 것으로, ‘새로이 출현하다(genos)’라는 뜻의 희랍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세대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대 연구가들이 사용해온 그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①‘부모세대’와 ‘자식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과 교체)의 원리로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②나이를 먹음에 따라 함께 연령층을 이동하는 동시 출생 집단(cohort)<sup>13</sup>을 의미하는 경우, ③‘청소년세대’나 ‘대학생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④‘전후세대’나 ‘4·19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

13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생물의 집단(코호트: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 다시 말해 태어난 시기가 대략 비슷한 이들의 집단도 세대로 부른다. “세대,” 『나무위키』(namu.wiki/w/%EC%84%B8%EB%8C%80, 검색일: 2019년 5월 22일).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세대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공유는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그 세대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행위유형을 형성하는 기초로 작용한다.

경우 등이다. 어떤 경우에도 세대란 말은 나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세대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대라는 말을 위의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sup>14</sup> 이 글에서는 인간에게 ‘한 세대(one generation)’는 30년이라는 사전적 정의<sup>15</sup>에 입각해 주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와 같이 계승과 교체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첫 번째 정의를 주로 내포하면서도 ‘동시 출생 집단’, 즉 ‘같은 시기에 출생한 집단’이라는 두 번째 의미와 함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이라는 네 번째 의미도 중첩적으로 함유해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유형론적 접근인 ‘세대론’의 세대는 엄밀한 사회과학의 단위가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서 호명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사회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인 데에서 구하지 않고 세대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지금의 청년담론은 기성세대가 주조하고 소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라며 『청년팔이 사회: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오월의 봄, 2019)를 쓴 김선기 석사는 세대주의적 담론 구조가 일상화되면 “다른 목소리의 실종”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특정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할 때 세대 변수에 집중함으로써 계급·젠더 등 다른 변수는 간과되고 만다는 것이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하는 관점이다. ‘사회 갈등의 축이 세대냐 계급이냐’ 하는 것은 해묵은 논쟁거리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세대보다는 계급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세대

14 정성호, 『20대의 정체성』(살림출판사, 2006).

15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세대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다. “세대,” 『네이버 국어사전』(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6월 9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세대는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신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말한다. 인간은 보통 30년, 초파리는 보통 12일이 한 세대다. “세대,” 『나무위키』.



라는 정체성은 자아 형성기 문화 환경과 청년기의 집단 경험 같은 주관적 요소들에 영향 받지만, 계급의 정체성은 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라는 객관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런데 86세대 담론이 계급 변수를 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덕진 교수는 “86세대 이후 86세대만큼 사회 상층부에 많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한 세대가 없다. 현실적으로 86세대와 계급이 많이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sup>17</sup>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언론은 당시 20-30대인 영파위에 주목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사회개혁이나 정치적 사안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젊은이들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서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사실 2002년 대선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참여와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몸에 밴 N세대의 특징이 가져온 인터넷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다. 월드컵응원과 촛불시위 등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터넷은 대선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인터넷 속에서 놓고만 있던 것 같던 젊은 세대들이 마침내 골방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여, 선거 이벤트 한마당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으며,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은 이제 엄연히 커다란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의 부상을 전문가들은 ‘세대혁명’ 또는 ‘세대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sup>18</sup> 이렇듯

16 이세영,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눈, 86세대와 청년이 다른 이유」, 《한겨레》, 2019년 10월 29일자(www.hani.co.kr,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17 김민아, 「커버스토리민주화 주역서 권력 중심에 선 그들,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되다」, 《경향신문》, 2019년 9월 28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10월 6일).

18 정성호, 『20대의 정체성』(살림출판사, 2006).

2002년에 일어난 월드컵거리응원-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는 촛불세대로의 혁명적 교체를 예고한 세대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세대전쟁’이 아닌 ‘세대게임’이라는 평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sup>19</sup> 김호기 교수는 같은 세대라도 그 안에는 이념 또는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대문제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세대문화, 세대갈등, 세대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는 분명 사회변화를 이끄는 동인의 하나”라고 주장했다.<sup>20</sup> 또한 ‘베이비붐세대,’ ‘에코(echo: 메아리)붐세대’와 같이 동시대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진정 세대를 칭하는 명칭일 텐데, 정치적 세대를 지칭하는 4·19세대나 386세대라는 용어는 동시대인 중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일부 [정치적 집단만을 지칭하므로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 필자는 세대론이 엄밀한 경험적 단위는 아닐지라도 한국민주화운동의 정치적 경향을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택했다.

세대와 혼용해 사용하는 말로 ‘대(代)’와 연대(年代)가 있다. 세대는 대와 거의 같다는 해석도 있다.<sup>21</sup> 이에 따르면 대라는 말도 세대에 준하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대, 30대, 40대 등 그 나이에 따라 그룹핑하는 것이 대의 용례이다.<sup>22</sup> 대(代)자 앞에 연(年)자를 붙인 연대(年代)는 시대와 비슷한

19 이에 대해 이철승 교수는 “세대론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위계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저항이다. 88만원 세대 이후 세대론이 왜 계속 소환되는가 하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는 동아시아적 연공서열에 기초한 독특한 위계구조가 있다. 서양적 관점에서 보기에 착취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세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위계에 대한 정면공격이다”라고 대응했다. 정용인, 「386세대 장기독점’이 비난 받는 이유: 이철승 서강대 교수 인터뷰」, 《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5월 30일).

20 김호기, 「40대를 생각한다」, 《경향신문》, 2019년 9월 4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9월 4일).

21 “세대,” 『네이버 국어사전』.

22 신문-방송에서 주로 애용되는 ‘2030세대(20-30대)’나 ‘4050세대(40-50대)’ ‘7080세

말이다. “지나간 시간을 일정한 햇수로 나눈 것”이라는 뜻으로 정의되는 연대<sup>23</sup>에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이 10년을 단위로 시대를 설정하는 견해와 연결시키면서 이를 세대로 보기도 한다. 급변하는 근현대사에서 대략 꺾어지는 해인 10년(decade)을 단위로 세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30년을 세대로 보는 사전적 정의와 ①번의 정의에 입각한다면 10년은 세대구분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시대구분으로 보아야 한다. 30년이 아닌 10년을 단위로 격동했던 한국정치사회운동의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한 편의적 용례라고 할 것이다.<sup>24</sup>

그런데 역동적인 사회상을 반영해 10여 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다. 이는 앞선 세대 정의 중 ④번의 의미와 가깝다. 보다 구체적으로, 10년 단위 세대 구분을 하는 견해로는 다음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운동보다는 사회조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광복/6·25전쟁 세대(1945-1954년생: 정치적으로는 6-3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59년생: 정치적으로는 1970년대 유신체제변혁주체 연배: 베이비부머는 이후 세대의 일부와 통합되기도 하는데 후술하고자 한다.)

86세대(1960-1969년생: 정치적으로는 386세대; 광의로 보면 민주화운동세대의 일부라고 칭해지지만 필자는 1960-1980년<sup>25</sup> 민주화운동세대와는 구별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86으로 출발한 86세대는 단순한 민주화를 넘어서서

---

대(70-80년대 학번) 등의 분류도 기본적으로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성호(2006), 앞의 책.

- 23 “연대,” 『네이버 국어사전』(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6월 9일).
- 24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나남, 1990). 한편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나남출판, 2005)에서는 신세대와 기성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 25 1960-1970년대가 아닌 1960-1980년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1980년의 민주화운동은 1981년 이후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혁명주의-반미주의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81년은 이전의 자유주의 민권운동적 민주화운동에서 혁명적 사회운동으로의 노선전환의 발동이 걸린 해로서 중요하다.

사회변혁 즉 혁명을 추구한 혁명운동세대이기 때문이다.)

X세대(1970-1979년생: 서태지와 아이들의 자유분방성으로 상징되는 대중 문화 전성기인 1990년대 중반 등장: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 태생으로 베이비부머 이후의 인구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sup>26)</sup>

에코붐세대(1980-1988년생: 88만원세대, 3포세대, 비정규직세대; 에코부머도 N세대 전반과 통합되는데 역시 후술함)

N세대(1989-1994년생)

M세대(Z세대, 1995-2001년생)<sup>27)</sup>

한편 에코붐세대와 N세대, 여기에다가 M세대 중 2000년생까지를 합해 Y세대(1980-2000년생을 포괄하는 밀레니엄세대)라고 하기도 한다(혹은 1980-1994년생까지를 밀레니얼-Y세대로 보고, 1995년생부터 Z세대로 보기도 한다).

시간이 갈수록 한 세대의 길이가 10년도 아닌 5년 내외로 짧아져 더 역동적인 사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0년대보다 더 짧은 동년배 그룹을 뜻하며 “서로 비슷한 나이”를 지칭하는 연배(年輩)<sup>28)</sup>라는 개념을 채용하면 세대가 30년이나 10년이나의 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보다 객관적인 ‘인구집단’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세대가 30년이라는 생물학적-사전적 정의를 고수하면서 10년 단위의 시대[연대] 설정을 세대설정과 통합해 다음과 같이 한국민주화 운동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

26 「밀레니엄 세대?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인가?」, 『bit consulting의 블로그』, 2015년 10월 1일(m.blog.naver.com/bitcons/220496519762, 검색일: 2019년 6월 18일).

27 “세대,” 『나무위키』.

28 “年輩,” 『네이버 한자사전』(hanja.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6월 13일).

[①1926년 6·10만세운동의 주축 세대인 학생<sup>29</sup>] → ①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1960년대진달래정치혁명주체年輩 → 1970년대유신체제변혁주체年輩로 단속적으로 계승됨] → ②1981-1990년대 386세대[1980년대 학생운동출신 혁명운동세대가 1990년대 386세대가 되어 사회로 진출] → ③ 21세기 촛불세대

1960년대 진달래정치혁명주체 연배(年輩)와 1970년대 유신체제변혁주체 연배는 모두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으므로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세대'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386세대는 1980년대 [혁명적]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대 사회로 진출해 민주화운동세대로부터 주도권을 양도받아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20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시민단체를 건설했으며 40-50대에는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sup>30</sup>

## V. 386의 장기집권

---

386은 촛불세대가 동력이 된 2016-2017년 촛불혁명의 배후조력자이자 시위의 장을 마련한 인사가 되어 결국 한세대 가까이[198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살아남았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운동], 정계, 노동계는 물론 기업의 중추에 오랫동안 봉직했으므로 가히 '장기집권'이라고 할 만하다. "도무지 늙지 않는 불로(不老) 세대의 최장기 집권. 대한민국은

---

29 유원모, 「6·10만세운동은 정치이념 초월한 거족적 독립운동」, 《동아일보》, 2019년 6월 10일자, A26면.

30 한경환, 「연대의 가치 부르짖던 이타적 386 어디 갔나」, 《중앙SUNDAY》, 2019년 8월 24-25일, 20면.

386의 나라다”라는 말도 있다.<sup>31</sup>

언론 부문에서 386의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독점-과점 현상에 일찌감치 주목해온 정용인 기자는 이를 ‘장기 386’이라고 이름 붙였다.<sup>32</sup> 시민사회 조직(노동현장 포함),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386의 과점현상은 2010년대 말에 피크를 이룰 정도로 지속적이었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386의 바로 아래 세대인 박용진 의원은 “386의 20년째 독점구조”라고 규정했다.<sup>33</sup>

사회학자 이철승 교수는 386세대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국가를 점유해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386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내적으로 응집된 ‘세대의 권력자원’을 시민사회, 시장, 국가를 가로질러 수립”했다는 것이다.<sup>34</sup>

이 교수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상무이사 이상 대표이사까지) 9만 3,000여명의 세대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임원의 8.9%에 불과했던 이들 세대는 다음 10년엔 60.3%까지 치솟는다. 여기까지는 이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전 세대(1950년대생)나 1990년대 후반 1945-1955년생의 비율도 각각 60%, 62%로 엇비슷했다. 그런데 2017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자리를 물려주는 연공제 순환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이전 세대들이

---

31 김정훈·심나리·김항기 공저, 우석훈 해제, 『386 세대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웅진지식하우스, 2019). 이 책은 부제에서 보듯이 ‘헬조선’의 책임을 86세대에게 물고 있다.

32 정용인, 「[포커스]기업도 ‘장기 386시대’의 멍에 걸렸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6월 2일).

33 「취업할땐 ‘3저 호황’ 퇴직 앞두고 ‘정년연장’…… 불로장생 386, 《중앙일보》, 2019년 9월 23일자, 5면.

34 이철승,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한국사회학』 53집 1호(2019), 1-48쪽;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문학과 지성사, 2019), 106쪽.

보통 50대 초·중반에 정점을 찍고 50대 후반부터 급속히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비해, 1960-1964년생들은 2010년대 초·중반에 40%를 돌파한 후, 후반이 되어도 37%를 차지하며 물러서지 않는다. 임원진에 진입한 386 후반부 세대 역시 35%를 차지하며 이들의 임원진 장악률은 70%를 훌쩍 넘긴다. 50대와 60대의 임원진 비율은 정치권에서 동일 세대의 국회 장악률(83%)보다 많은 86%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국 기업 상층 권력 구성의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386 세대가 자리를 독점하면서 후속 세대는 배제 당했다. 2000년대 후반 임원진에서 386 세대의 비율은 29.6%였으나 2010년대 후반에 1970-1979년생의 비율은 10.4% 밖에 안 된다. 이철승 교수는 청와대·정부 요직에서 40대의 실종 현상이 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sup>35</sup> 이 교수는 “한국의 기업들은 정치권·국가부문의 세대교체에 맞춰 국가권력에 ‘연줄이 닿는 동기’들을 이사진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국가부문의 386세대가 장기집권을 할 경우, 기업부문의 386세대가 장기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분석했다.<sup>36</sup>

이철승 교수는 평등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으며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진취적이라며 스스로 자부했던 386세대가 집권세력이 되자(민주화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자) 오히려 세대 간 정치권력 분배는 가장 불평등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평등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전파했지만, 자신은 연공제(年功制)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적 위계 문화를 여전히 체내화했다”고 586세대를 비판했다. 또한 ‘586세대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 독점이 분노의 근원’

35 「임원 72%, 의원 44%…… 대한민국은 386의 나라」, 《중앙일보》, 2019년 9월 23일자, 1면.

36 정용인, 「[포커스]기업도 ‘장기 386시대’의 뒷에 걸렸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6월 2일).

이라고까지 적시했다. 이전까지 586세대는 ‘군부독재에 저항했다’는 선민의식을 지녔고, 우리 사회는 부채의식을 떨치지 못했으나 2019년 8월 말 ‘조국 정국’의 도래로 이 프레임은 흔들렸다.<sup>37</sup>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386세대가 586이 되어 권력의 주류층을 형성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독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sup>38</sup>

또한 이철승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자본이 비정규직을 함께 착취하는 구조다. 노동운동(노조), 정규직, 대기업의 세 가지 분절구조가 결합해 독특한 위계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 구조의 최대 수혜집단이 386과 일부 소수의 포스트386세대다. 상층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 중·장년층 세대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구조적 문제는 이렇게 도래한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이면서 세대론의 문제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철승은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했다.<sup>39</sup> 그는 “후속 세대에게 배분돼야 할 부와 권력을 386세대가 오랫동안 독점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때 분배정의를 부르짖던 386 세대가 “지금은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했다”는 비판이다.<sup>40</sup>

현 정부가 386세대의 장기집권을 강화할 65살 정년 연장을 위해 군불을

- 
- 37 이철승,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한국사회학』 53집 1호(2019), 1-48쪽; 『불평등의 세대』(문학과 지성사, 2019); 우석훈·박용진, 「경제로 평생 간 박정희 봐라 “586 경제 췌병”」, 《중앙일보》, 2019년 10월 5일자.
- 38 이재근, 「386세대의 기억」, 《한라일보》, 2019년 9월 17일자(www.ihalla.com, 검색일: 2019년 9월 24일).
- 39 장덕진, 「결손민주주의와 장기 386」, 《경향신문》, 2019년 3월 26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5월 30일).
- 40 「입원 72%, 의원 44%…… 대한민국은 386의 나라」, 《중앙일보》, 2019년 9월 23일자, 1면.



지피고 있는 상황을 그는 우려한다.<sup>41</sup> 1997년 시작된 외환위기로 산업화세대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자 기업의 386세대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기업은 짧게 3-4년, 길게 10년 가까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386은 아래위가 없는 조직에서 사실상 홀로 남겨진 거대한 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이 되었다. 현경환 기자는 “연대의 가치를 부르짖던 이타적 386들이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sup>42</sup> 조동근 교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조가 정규직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같이 386세대의 수혜에만 집중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평했다.<sup>43</sup>

우석훈 교수가 박권일과 같이 쓴 『88만원 세대: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레디앙, 2007)을 기점으로 수많은 세대론이 나왔다. 이 책은 왜 87년 체제는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불행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를 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386세대와 유신세대가 자신의 몫으로 확보된 경제적 성과물 중 일부를 다음 세대인 88만원 세대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세대 경제학’ 책이다. 386세대는 취업난 걱정 별로 안 하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 누릴 것 다 누리며, 연금폭탄을 뒤로 넘겨가면서, 늙어서까지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가는 정말 몰염치한 세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sup>44</sup>

한편 전상진 교수는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문학과 지성사,

41 김지훈,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 《한겨레》, 2019년 8월 11일자(www.hani.co.kr, 검색일: 2019년 8월 11일).

42 한경환, 「연대의 가치 부르짖던 이타적 386 어디 갔나」, 《중앙SUNDAY》, 2019년 8월 24-25일, 20면.

43 「집값 상승 혜택 본 386, 정규직 노조도 주축」, 《중앙일보》, 2019년 9월 24일자, 5면.

44 김광현, 「몰염치한 386세대 되지 않으려면」, 《동아일보》, 2019년 9월 26일자 (www.donga.com, 검색일: 2019년 9월 26일).

2018)에서 “세대 전쟁론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빈약하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세대 전쟁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는 국력 추락, 성장동력 상실, 부양비 급증, 혁신능력 약화를 낳는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노인들은 수적 우세에 기초해 권력을 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킨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오류”라고 본다. 노인들은 생산 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이들이 단일한 행동단위로 묶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세대 형평성 논의의 정치적 효과를 두고 “불평등한 권력, 재산, 지배 관계 대신에 세대를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상정함으로써 불평등한 기존 구조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봤다. 박근혜 정권이 ‘고임금·정규직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사례를 들며 “사회문제의 책임을 자본가·권력자 등 전통적 기득권자에게 묻지 않고,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기성세대라는 ‘새로운’ 기득권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승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에서 상층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상승 자제 등을 주장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sup>45</sup> 현재 사회문제(불평등)의 원인은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권력자가 설정한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6세대에 전가하여 결국 이를 은폐하는 자본가·권력자들의 농간에 돌아나는 것이 바로 세대 전쟁론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86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는 젊은 세대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 586세대의 대표격인 이상호 의원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당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는 당 대표가 된 적이 없다. 정치생활

---

45 김민아, 「커버스토리」민주화 주역서 권력 중심에 선 그들,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되다, 《경향신문》, 2019년 9월 28일자(news.khan.co.kr, 검색일: 2019년 10월 6일).

20년 동안 원내대표 한 번 했는데, 그게 기득권인가. 우린 주로 당직을 맡으면서 참모로 일했다.<sup>46</sup> 하지만 당직을 맡으며 오히려 지역구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86세대 기득권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sup>47</sup> 86이 최상층에서 지배하지 않았고 참모역할을 했을 뿐이며 독점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우상호 의원과 같은 386 주체세력은 그들이 장기집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6학번으로 학생운동 선배격인 우원식 국회의원도 86그룹에 대해 “그들의 집단적 헌신성은 어떤 정치세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근거 없이 86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48</sup> 또한 1980년대 민주화에 헌신했던 386세대가 결집해 사회에 진출했던 1990년대에 이들의 탈인습적 참신성에 대해 기대했던 한상진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386이 과거의 괴물(군부독재)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연령 집단으로서 50대가 한 사회의 중추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역사상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면서 386세대 정치인이 전반적으로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은 채 5년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해 ‘386 장기집권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sup>49</sup> 장기집권은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sup>50</sup> 이렇듯 386이 사회 각 분야 최상층은 아니지만 주류(주축으로서의

46 「386 장기집권?…… 우상호 참모 역할 vs 원희룡 권력 독식」, 《중앙SUNDAY》, 2019년 9월 28-29일자, 6면.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홍위병] 완장을 차고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47 「이준석 ‘정치 주류 된 586 끈대질’ 우상호 ‘도전도 않고 비켜달라니」, 《중앙일보》, 2019년 6월 20일자, 8면.

48 임장혁, 하준호, 「임종석 고속도로 대신 국도 선택? 여당선 “86퇴진론 안고 간다는 뜻」, 《중앙일보》, 2019년 11월 19일자, 4면.

49 「한상진 교수 정치권 386 비판: 권력 손에 쥔 386, 과거의 괴물 닮아가고 있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26일자, 5면.

50 「따가운 시선 받는 386의 항변: 기득권 틀어쥔 386 끈대는 소수, 전체 매도는 억울」, 《중앙SUNDAY》, 2019년 9월 28-29일자, 6면.

중견참모)의 반열에 비교적 오랫동안 올라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을 강타한 이후인 2019년 9월 23-24일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86세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86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독점해 후속 세대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64.3%가 동의하기도 했다.<sup>51</sup> 386세대의 막내이거나 X세대의 맏형격(1969년생 혹은 1970년생)인 김경울 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은 2019년 9월 조국 사태로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sup>52</sup>

## VI. 2020년대에는 촛불세대로 교체될까?

386은 2020년대 초까지 정계의 주축을 이루다가 결국은 세대의 자연수명이 다하여 촛불혁명의 기반인 촛불세대에게 그 주도권을 어쩔 수 없이 양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82학번인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 청문회 문제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2019년 8월-9월 초 이후 386세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386의 장기집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 586세대의 기득권적 민낯이 드러나면서 세대교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비선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다가 2016년 촛불시위에 직면했고 2016

51 「386세대의 사다리 건너차기 20대 72%, 30대 67% 공감」, 《중앙일보》, 2019년 9월 27일자, 4면.

52 조문희, 「조국에 입 다문 참여연대…… 86세대 도덕적 기반이 사라져 간다: 김경울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 위원장」, 《경향신문》, 2019년 10월 2일자.

년 12월 3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확정되어 파면되었다(2016년 겨울부터 이어진 촛불혁명).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적폐청산, 사법개혁 등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진영논리에 갇혀 촛불이 제기한 과제를 성취하는데 미진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8월-9월 초 조국 법무장관 임명문제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촛불의 정신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라고 해석했다(촛불을 절대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촛불정신은 불공정-불평등-특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박용진 의원의 해석도 있다<sup>53</sup>). 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직후 헌법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단행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수반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일이 촛불혁명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음에도 마치 촛불혁명이 완성된 결과로 탄생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첨가했다<sup>54</sup>(그런데 야당[그리고 검찰]과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하지 못한다.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다.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당의 총재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sup>55</sup>).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탄핵을 배경으로 탄생한 권력인 만큼 과거와

53 우석훈, 박용진, 「“경제로 평생 간 박정희 바라” “586 경제 쟁쟁”」, 《중앙일보》, 2019년 10월 5일자.

54 이석연, 「국민을 장기관의 줄(卒)로 보는 대통령」, 《조선일보》, 2019년 9월 10일자, A27면.

55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트] ‘조국 내전’ 이후에도 ‘정의·법치·공정’을 말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19년 10월 5일자.

유사한 수준의 일반적 도덕 기준으로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사명이다. 시민들은 높아진 도덕적 기준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장관 임명 등에 실망했다.<sup>56</sup>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9월 6일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위법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적어도 위선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일부 국민들은 '내로 남불'의 전형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독선적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았고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보다 하락해 역시 중도층의 이탈을 목도해야 했다. 다분히 이념적-정치적인 386이 586이 되어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념적으로 좌편향인 강남좌파라는 묘한 불균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sup>57</sup> 그 전형적인 예가 조국 장관이었다.

정근식 교수는 분권과 협치의 정신이 촛불혁명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고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일종의 시대정신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 최근 2년 반 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장관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모든 권력이 예전처럼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이라고도 했다.<sup>58</sup>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분권과 협치를 이루라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

56 임장혁,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 조국도 싫고 한국당도 싫어…… 20대, 정치 냉소주의 빠졌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14일자.

57 이재근, 「386세대의 기억」, 《한라일보》, 2019년 9월 17일자.

58 정근식, 「[조국]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다산포럼』 제974호, 2019년 9월 17일자(www.edasan.org, 검색일: 2019년 9월 22일).

일부 중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철승 교수는 “일자리 고임금을 독점한 부모세대(386)가 움켜쥔 자원과 권력을 지식 세대와 나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그렇지 않다면 세대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59</sup> 그렇지만 이러한 인위적 양보 없이도 2020년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세대는 과연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386세대처럼 1세대 30년을 계속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2020년대 이후에 새로 등장한 주체세력에게 양도할지 주목된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러한 세대교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국 이래 가장 성공한 세대란 말을 듣는 386세대지만 조국 이슈가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블랙홀이 되었다는 2019년 9월에는 386세대의 유통기간이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다.<sup>60</sup>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019년 9월 23-24일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86세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386세대의 후속세대[포스트386]인 30-40대 인사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2.4%가 공감하기도 했다.”<sup>61</sup> 그러나 냉혹한 현실정치는 확실한 세대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2002년, 2004년, 2008년과 2016-2017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촛불은 1987년의 6월[민주]항쟁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2008년과 2016-2017년 거리로 나와 시위의 기반이 되었던 10대-20대는 6월항쟁 때 거리로 나섰던

---

59 양성희, 「386 세대 유감 '내로남불 끝판왕」, 《중앙일보》, 2019년 8월 21일자, 30면.

60 「386컴퓨터 AI 못돌려 유통기한 다가온 386」, 《중앙일보》, 2019년 9월 26일자, 1면.

61 「386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20대 72%, 30대 67% 공감」, 《중앙일보》, 2019년 9월 27일자, 4면.

475-386의 자식 세대였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세대교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1960년 4·19세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45년 해방에 출생한 해방둥이(4·19당시 중고생)와 그 직전세대(1930년대 말기생(4·19당시 대학생)과 1940년대 전반기생)가 주축이다. 4·19주축세대의 자식 중 상당수가 1960년대 생으로 1980-1990년대의 386이다. 2008년과 2016-2017년 촛불[과 SNS]세대는 역시 386의 아들뻘이다.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아들세대인 1979-1992년생 ‘에코(echo: 메아리)붐세대(산 정상에서 소리치면 얼마 후 메아리가 되돌아오듯 6·25전쟁 후 대량 출산이란 사회현상이 25-30년 정도 지난 후에 2세대의 출생붐[2차 베이비붐]으로 메아리가 되어 다시 나타나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풀네임은 ‘베이비붐 에코 세대(약칭 에코 부머즈[echo boomers])’이다)<sup>62</sup>가 주축으로 이후 세대까지 포섭해 자연스럽게 운동의 주축을 이루어 촛불 속에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뻘인 진달래정치혁명세대에서 아버지뻘인 혁명386세대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촛불세대로 3대가 이어졌던 것이다.

---

62 정과리, 한윤형, 「[에코붐세대를 말한다] ‘따로 또 같이’ 베이비부머·에코부머 소통하라」, 《서울신문》, 2011년 7월 17일자(www.seoul.co.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통계청이 2012년 8월 2일 발표한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 49-57세이고, 에코세대는 1979-1992년생, 20-33세였다.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 두 세대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34.4%)을 차지했다. 전경하, 「베이비부머vs에코세대…… 통계로 본 ‘너무도 다른 인생살이’」, 《서울신문》, 2012년 8월 3일자(www.seoul.co.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반면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Baby Boomers를 1946-1964년생으로 2006년 기준으로 7,488.9만 명이며 Echo Boomers를 1977-1993년생으로 6,399.3만 명으로 추산한다. 한국의 경우 해방둥이와 전쟁둥이는 혼란통에 많이 사망했으므로 대량출산이 좌절되었고 결국 베이비부머가 될 수 없었다.



## VII. 30년 세대론의 계보

그렇다면 30년 세대론과 입각해 그 계보를 보다 자세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1987년 286세대[베이비붐세대 중 최하위 연배와 그보다 나이가 2-4살 어린 연배]가 주축이 되어 베이비붐세대[주축은 당시 375]와 연합으로 민주화운동을 수행해 직선제 개헌이라는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75[50년대 생으로 1970년대에 대학 입학]와 86[60년대 생으로 1980년대에 대학 입학]중 前期86[후술함]으로 구성된 베이비붐세대는 추구한 정치적 방략에서 각각 낭만적 민주화(75)와 혁명적 민주화 추구(86)로 구별되지만 민주화라는 목적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세대로 묶일 수 있다. 한편 주로 08[80년대 생으로 2000년대에 대학 입학], 19[90년대 초 태생으로 2010년대 초에 대학 입학]로 구성된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의 아들뻘 후계세대로 21세기 초반 촛불시위의 동력이었으며 에코세대 이후 연배가 2016-2017년 촛불혁명의 기반세력이 되었으므로 386에서 촛불세대로의 한국민주화운동의 세대교체는 현재진행형이다.

세대교체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의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적이며 친미적인 분위기가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민주화운동 실패로 좌절을 맞본 후 1981년 이후 반미[자주]적이고 혁명적인 86세대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로 교체될 조짐이 보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낭만적·친미적으로 사고했으나 좌절을 맞보았고 1981년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1년은 [대]학생운동의 주류가 교체되는 중요환 시기였다(그러나 반미가 사회적 금기를 깨고 일반대중들에게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용인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체제가 수립되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한 1987년 전후부터였다). 우선 1981년 유신체제변혁주체 연배의 막내인 78-79학번이 대학 3-4학년이 되어 서클[동아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새롭게 등장한 80년대 학번의 만형 80학번이 중견간부가 되어 이념서클[사회과학동아리: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 사회주의가 들어와 조직된 비밀독서회를 연상시킴]을 지하[under]화하며 졸업정원제로 인해 그 인원수가 확충된 81학번 신입생들을 조직화했다. 80학번이 조직화한 86은 기존 학생운동의 분위기가 낭만적-소시민적(petit bourgeoisie)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중심주의[나중에 위장취업자가 되어 노동현장 등으로의 투신함<sup>63</sup>]를 1981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1980년대 혁명의 시대가 개시되었던 것이다.<sup>64</sup> 80학번 이후는 실천의 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다.<sup>65</sup>

전두환 정권에 의해 1983년 12월 21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유화적인 학원자율화 조치가 1984년 2월 가시화되기 전까지 대학에는 경찰들이 상주해 있었다. 1980-1984년까지 학원은 공포 분위기가 지배했으므로 운동권 학생들은 혁명가가 되기 위해 소규모 학내 시위를 비밀리에 모의한 후 전단 살포를 거쳐 구속당하면서 군대문제를 해결하는 경로(일명 '신변정리')를 거쳤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유화국면에 대응해 점조직에 근거한 비밀-소규모 운동 방법론도 공개적인 대중운동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같은 386 중에서 1960년대 전반기 출생자[베이비붐세대의 막내]인 1980년대 초-중반 학번[전기386: 80학번부터 85학번 정도]과 1960

63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이른바 '계몽'하고 조직화하려고 노학연대가 이루어졌다. 김원,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64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새로운 세상, 1999).

65 이규봉, 「79년 인간연구반 80년 서클연합회」, 자유교양 50주년 편집위원회 편, 『연세자유교양』(청아출판사, 2019), 93쪽.

년대 후반기 출생자인 1980년대 후반 학번[후기386: 87년체제가 수립된 이후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86학번 이후부터 89학번까지] 사이에 386특유의 혁명성은 공유하면서도 운동 성향이 다소 다르다. 전기386은 혁명운동과 현장투신에 집착하는 강경파가 많은 반면 후기386은 주로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된 대중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했으므로 전자(前者)의 불세비키적인 혁명노선[소수직업혁명가의 비합법적인 폭력혁명노선]을 대중적-현실적 요구에 따라 개량화시킨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 후기386에 들어서 혁명성-투쟁성이 온건화-개량화되어 다소 변화했던 것이다. 서울대생 김세진-이재호의 분신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1986년은 격렬한 반미의 해였는데 이러한 격렬한 투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운동권 내부에서도 극좌적 운동노선에 대해 내부적 반성을 하게 되었다. 또한 혁명적 투쟁은 정권이 유화국면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실을 맺었고 결국 1987년 들어와 대중친화적인 개혁적 온건노선이 주조인 노선전환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학생운동의 핵심은 전기386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후기386은 90년대 학번(소위 X세대: 1970년대생 중심)으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1990년 전후 소련과 동구 등의 현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운동권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난에 직면해 내부적 토론을 진행해야 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스터디 목록에서 사회주의나 맑스주의에 관련된 서적이 빠지게 되고 이념동아리도 쇠퇴하게 되었으므로 X세대는 이념적 전환의 모색 와중에 처해졌다. 급기야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체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게 된 것[주사파의 몰락]<sup>66</sup>도 경직된 이념주의자

66 이후 운동권은 반미와 민족해방 구호를 버리고 “친일파=기득권=독재자의 후예”라는 프레임을 내걸었다는 평가가 있다. 최훈, 「양극의 독침」, 《중앙일보》, 2019년 6월 18일자, 31면. 급기야 친일파를 토착왜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386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X세대는 보다 자유분방한 에코세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386의 혁명성이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과 함께 21세기 학원(學園: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는 1960-1980년 대학생 특유의 낭만적이고 리버럴적 성향과 유사점이 없지 않으므로 전자(前者)가 후자를 부활·계승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민주공화주의')을 내세우는 21세기 개인주의적 촛불신세대가 등장해 박근혜 정부의 교체를 달성했으므로 독재[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구세대의 자유주의적 이념정서가 제한적으로나마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이념면에서 보면 촛불세대는 그들을 느슨하게 조직화한(후술함) 386 운동[권]단체들의 혁명이념보다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의 이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촛불 시대에 1960년 진달래 정치혁명주체의 혁명적이었지만 낭만적 한계를 가진 자유주의적 저항정신이 다시 등장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촛불세대 자체는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와 30-60년이라는 큰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념적으로라도 부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화운동의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가 아닌가 한다. 시민들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자체의 보편적 성격이므로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인적으로나 조직적인 특성 면에서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으므로 부활론은 반박될 수 있다.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의 엄숙-비장함과 진지함, 386의 혁명성, 경직성이 21세기 촛불세대에게는 거의 없다. 그들은 즐기면서 시위한다. 따라서 촛불세대는 전세대와의 계승성보다는 단절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가 교체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촛불세대

자유분방성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단결(solidarity: 자유분방성과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분방에 진정 배치되는 것은 확일성이며 자유분방하면서도 단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근거가 빈약한 추정에 불과하지만 자유분방성의 정도[자유주의신봉정도]가 촛불 세대가 100이라면 1960-1980년 세대는 50정도 되며 386은 그 반인 25정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유분방하다는 점에서 촛불은 386보다 1960-1980년 운동권과 더 유사하다)의 정신이 있기에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화운동 특유의 단결성과 저항성이 3세대에 일관되게 계승되어 관통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다.

한편 촛불세대는 조직 면에서는 자신들을 느슨하게 조직화한 386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이 상대적 대미자주론자인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기여하고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이 탄핵각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이 반이명박, 친노무현 [대미자주적] 정서로 이어지자 노무현 지지세력들(386)은 2000년대 촛불시위들은 물론 2016-2017년까지 모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직 면에서 촛불과 386은 판이하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양상을 보면, 이전 민주화운동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도부의 실질적 부재, 개인적 또는 소집단적 참여, 평화와 질서에 대한 강박, 축제와 저항의 융합 등의 양상들은, 이전 민주화운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무엇보다 이전 민주화 운동을 선도했던 젊은이들이 소수의 엘리트 대학생들이었다면, 오늘날 촛불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엘리트가 아니다. 존재조건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sup>67</sup>

---

67 오제연, 「이완범, 「4월 혁명과 세대」에 대한 토론문」, 2019년 6월 28일, 2쪽.

특히 최초의 대규모 촛불시위라 할 수 있는 2002년 촛불시위 때는 기존 [386]운동권과 구별되는 최초의 주창자들(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2002년 11월 30일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됨)이 뚜렷했고, 이들은 사실상 '지도부' 역할을 수행했다(2016-2017년 때는 386이 이끈 측면이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 그룹과 운동권 단체 사이에서 논쟁을 주도하고 촛불시위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이들은, 촛불시위 이후 2003년 반전평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를 만드는 등 나름의 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sup>68</sup> 2002년 촛불시위에 10대들이 새롭게 신세대로 등장했던 것이다. 또한 2019년 4월 25일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0대들의 '멸종저항' 시위대가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주변 아치에 등장했다. 15살 가브리엘은 "과거 세대의 실수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싶지 않아서 왔다"고 말했다.<sup>69</sup> 10대의 등장에 따른 세대교체가 전지구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이례적이지 않다.

이렇듯 촛불세대는 1960년대 세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386과도 이념적 지향이 다른 자유분방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별적-단절적인 세대로서 독자적인 집단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물론 아버지 세대와도 단절되어 있다. 신세대가 2008년은 물론 2016-2017년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변화의 동력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했으므로 2020년대 이후 사회운동계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주도권을 행사하며 자연수명 면에서 기성세대 증추로서 작용할 시기를 거의 지날 686을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0년대 이후 사회운동 현장에서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룩될

68 한윤형, 『키보드 워리어 전투일지 2000-2009』(텍스트, 2009); 한윤형, 「촛불시위와 세대론[촛불 1년 특집] 3부 촛불을 넘어서②」, 『미디어스』, 승인 2009년 5월 3일 (www.mediaus.co.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69 김성탁, 「시위 나온 10대들의 이유 있는 아우성」, 《중앙일보》, 2019년 5월 10일자, 33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민주화운동사 초유의 분명하고 진정한 세대교체가 될 것이다. 1960년대 4·19세대와 1970년대 반유신그룹에 이은 1980-1990년대 386으로의 교체는 민주화 추진이라는 면에서 보면 계승의 측면이 없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한 세대교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대‘교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계승보다 단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촛불세대는 전세대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새로운 신세대’라고 할 것이다. 4·19세대를 기성세대라고 할 때 아들뻘인 386은 신세대이며 손자뻘인 촛불세대는 두 선행 세대를 지양해 뛰어넘은 개신(改新)세대 내지는 중신(重新)세대, 나아가 창신(創新)세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촛불세대는 1980년 이전 한국현대사에서 금기였던 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2002년과 2008년 운동에서 촛불세대는 [반미까지는 아니나] 상대적으로 대미자주적인 의제 아래 운동을 펼쳤고 2004년과 2016-2017년 운동에서 촛불세대는 의회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펼쳤다. 따라서 반미주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확대되어 급진화 될 진전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촛불의 발화 과정에서 반미주의로 무장한 386의 일파는 그렇게 진전되기를 원했고 2017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높이든 태극기 부대가 촛불세대를 매도하려 했지만 촛불세대는 대체로 선을 넘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를 견지했다. 촛불세대는 반미-자주적 의제나 헌정질서 수호 의제를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설정하는 신축자재성(伸縮自在性)을 보였으므로 나이는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나름대로 성숙된 민주적 시민의식-주권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디 촛불집회는 기독교(촛불을 들고 성탄절 등에 철야기도[vigil]를 함)와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활용했던 행사에서 그 연원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5-6월 월드컵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축제형태의 거리응원이

2002년 12월의 효순·미선 두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의 열기로 결합되던 전례도 있었다.<sup>70</sup> 이때부터 하나의 시위 형태로 정착된 촛불집회는 축제와 추모라는 상반된 성격을 결합한 집합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2002년 12월은 모임의 취지상 축제보다는 추모의 성격을 가지는 예외적 경우이다). 2004년 봄 탄핵반대 집회에 이어 발생한 2008년 5-6월 한국의 ‘촛불시위’는 예전처럼 특정 주도세력이 깃발을 들고 이끌어가는 시위가 아니라 익명의 다수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장난처럼 제각기 노는 독특한 형태의 ‘축제적 항의 시위’이고 가벼운 행사성 이벤트(event)였으며 정치참여열풍을 극명하게 표출했던 현상이었다.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이벤트성 행사가 사람들을 끌어 모았으므로 열풍이 아니라 일시적 유행(fad)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000년대를 관통하는 대중의 정치참여 열풍으로 보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어서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시위가 결국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으므로 단순한 유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촛불시위는 확실한 사후계획이나 구상, 짝 짜여진 조직된 지도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결과를 산출했으므로 낭만적 봉기의 성격도 가진다. 4·19와 촛불집회는 모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구조적 변화(새로운 체제의 수립)를 산출한 사회혁명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모여 정권 타도라는 결과(그리고 새로운 체제의 수립은 기존정치권에 위임해 큰 변화를 기하지 못함)를 산출한 낭만적 봉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4·19나 5·18때와 같이 목숨을 건 시위는 아니었고 깃발이나 획일적 구호가 이끌었던 이전시위와는 집회 참여의 분위기와 성격은 달랐으므로 세대교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대는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서 외쳐진 ‘이명박 아웃’, ‘박근혜 퇴진’ 구호는 ‘이승만 퇴진’,

70 이 당시 촛불집회와 반미운동과의 연관성은 홍성태 글, 노순택 사진, 『생각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반미 교과서』(당대, 2003)를 통해 볼 수 있다.



‘유신철폐’라는 이전 집회의 구호와 맥이 닿으므로 공통점도 부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4·19, 5·18, 6월항쟁, 촛불시위는 역시 민주화운동이라는 넓은 틀에서 같이 묶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VIII. 맺음말

---

1960년 4·19에서 시작된 민중의 힘은 1960-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전통을 이어 1980년대 내내 격렬한 시위를 지속시켰으며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결집되었다. 1987년 2·12총선의 경우와 같이 국민들의 ‘바람’과 함께 정치는 급변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점화된 촛불은 하나의 ‘뜨거운 바람[열풍]’이 되었으며 이러한 바람[風]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바람(소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바람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에 휘둘리다가 결국 2016-2017년 촛불시위로 퇴진해야 했다.

1960-1980년에 운동을 주도한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적인[친미적인] 민주화운동세대가 1981년 이후 [반미]혁명적386세대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21세기 [개인주의적인] 촛불세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화운동세대 교체론을 논한 이 연구의 결론이다. 따라서 한국민주화운동은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1981-1990년대 혁명운동세대(혁명적 386세대)→21세기 촛불[혁명]세대(2002-2017)로 그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세대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계속 성숙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대교체를 통해 근 60년 간의 장기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4·19와 6월항쟁, 촛불혁명은 계승성보다 단절성이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쟁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권을 확립하며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60년 봄과 1980년 봄, 1987년 6월, 2016-2017년 50여 년간 이어진 혁명은 단속적이었지만 민주화라는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50여년 간의 혁명(촛불 이후에도 광장에서 혁명적 구호가 난무하므로 '60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비조직 민중에 의한 단속적(斷續的) 계속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속적 계속혁명이 형용모순이므로 '시기적으로는 단속적[이고 추구한 목표와 이념 지향 면에서는 선택적인] 계승혁명'이라고 수정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 혁명사례만을 따로 고찰하는 기존의 단절적인 현대한국혁명사례연구를 하나로 이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한국현대혁명은 1960년 봄과 1980년 광주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명예혁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1960년 유혈과 1980년 폭력을 유발할 것은 모두 정권이었다. 민중들은 당초 평화를 원했다. 1980년 광주는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유발한 자위적 정당방위였지 폭력적 반란은 아니었다. 따라서 시민군의 무장과 폭력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1987년에는 박종철, 이한열 등이 사망해 시위를 확산시켰지만 시청 앞 광장에서의 시위와 같은 큰 집회에서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비유혈적인 비폭력 명예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이는 혁명은 폭력을 수반한다는 프랑스 등 유럽의 혁명론과 대비되는 한국의 특수한 특징이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적 반란으로 접화한 봉기가 한국 유사 이래로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1980년대 이후 86세대의 운동 양상은 이전보다 격렬했으며 폭력을 수반한 투쟁을 일부러 회피하지는 않았던 측면은 있었다.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 저항도 최루탄과 불법 구속, 고문, 강제징집 등 독재체제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자연스러운 주체적 대응이었다. 20만이 사망한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를 경험한 한국의 혁명주체들은 이후 부득이하게 정당방위(자위권)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적 방법의 사용을 자제해 일종의 그람시(Gramsci)식 '수동혁명'을 수행했다. 한국이 특별히 평화애호 국가라서 3·1 운동과 4·19혁명 과정에서 비폭력을 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혁명세력이 기존 정치세력을 압도할 규모라면 영국 명예혁명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처럼 무혈혁명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00만의 비조직 민중이 광장에 나와 결국 혁명적 결과를 쟁취했으며 '광장민주주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비조직 민중의 항쟁은 19세기 이래 발생한 민란에서 그 연원(淵源(起源))을 찾을 수 있다.<sup>71</sup> 물론 전근대 한국에 빈발한 수많은 난(요청의 난, 망야-망소이의 난 등)에서 이러한 비조직 민중 항쟁의 시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불의에 저항한 한국민중의 투쟁 역사는 다른 나라와 같이 간헐적으로나마 이어졌다. 그런데 비조직인 성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항쟁이 일어났을 때 미(未)조직이었으나 항쟁 참여 후에는 반(半)조직-준(準)조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비조직 민중이 주도했다는 것도 조직적 혁명을 정형화시킨 러시아 등의 조직적 혁명과 대비되는 한국현대혁명의 특수한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러시아 볼셰비키 당과 같은 치밀한 혁명조직이 유사 이래로 없었다. 물론 프랑스혁명 등 세계적 혁명도 역시 볼셰비키당과 같은 조직은 없었으므로 러시아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조직이 점차 만들어졌다. 미(未)조직이 준(準)조직이 되었던

---

71 안병욱, 『19세기 항회와 민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것이다. 그렇지만 혁명의 동력인 민중은 혁명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조직화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비조직적 민중이 주도했으므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비조직, 비폭력, 단속적 계승혁명'은 한국 혁명이 가지는 독특한 3대 특성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2004.
-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 오월의 봄. 2019.
- 김원,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김정훈·심나리·김항기 저, 우석훈 해제, 『386 세대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 웅진지식하우스. 2019.
-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 2005.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
- 이정식 편, 『해방30년사 3: 제2공화국』. 성문각. 1976.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2019.
-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1999.
- 전상진,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 지성사. 2018.
- 정대철, 『장면은 왜 수녀원에 숨어 있었나』. 동아일보사. 1997.
- 정성호, 『20대의 정체성』. 살림출판사, 2006.
-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1990.
- 홍성태 글, 노순택 사진, 『생각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반미 교과서』. 당대. 2003.
- 한윤형, 『키보드 워리어 전투일지 2000-2009』. 텍스트, 2009.

### 2. 논문

- 김경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한국 사회와 데모」. 김경화, 이토 마사아키, 『21세기 데모론: 변화를 이끄는 유쾌하고 떠들썩한 저항의 미디어, 데모』, 놀민. 2018, 37-58쪽
- 안병욱, 「'촛불혁명'과 세계의 혁명사」.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8).
- 오제연, 「이완범, 「4월 혁명과 세대」에 대한 토론문」.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8).
- 이규봉, 「79년 인간연구반 80년 서클연합회」. 자유교양50주년편집위원회 편, 『연세자유교양』, 청아출판사, 2019, 86-93쪽.
- 이철승,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한국사회학』 53집 1호, 2019, 1-48쪽.
- 이현환, 「진환기의 보훈 정책: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학술토론회(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 2019년 4월 1일.
- 정현목, 「미완 혹은 진행 중인 혁명: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한국프랑스사학회 공동주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8).
- Lee, Hyeon Woo, "Political Implication of Candle 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40 no. 3. 2009, pp. 495-526.

## 국문초록

1960년 봄부터 시작하여 1980년 봄, 1987년 6월, 2016-2017년 촛불시위로 거리에서 50여년간 이어진 혁명은 단속적(斷續的)이었지만 민주화 추구라는 면에서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50여년 간의 장기혁명(2020년에도 거리 시위는 현재진행형이므로 '60년 혁명'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비조직 민중에 의한 단속적(斷續的) 계승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4·19에서 86세대·촛불로 이어진 장기혁명은 바로 세대를 넘은 혁명인 것이다. 이 연구는 개별적 혁명사례만을 따로 고찰하는 기존의 단절적인 현대한국혁명사례연구를 하나로 이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현대혁명은 1960년 봄과 1980년 광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명예혁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의 '60년민주화 혁명'은 비조직 민중이 주도했으므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조직, 비폭력, 단속적 계승혁명'은 한국현대혁명이 가지는 독특한 3대 특성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0. 1. 7.

심사일 2020. 1. 29.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4·19(4·19[April Revolution]), 촛불시위(Candlelight Protest), 386세대(386 generation), 촛불세대(Candlelight gener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혁명(revolution), 세대(generation), 단속적(斷續的) 계승혁명(intermittent-yet-successive revolution), 한국60년민주화혁명(Korea's 60-year democratic Revolution), 비조직 민중(unorganized Minjung), 비폭력(non-violence), 거리 시위(Democracy in the Streets)

## Abstracts

### From April Revolution to the 2017 Candlelight Protest: Street Democracy and the 60-year democratic Revolution in Korea

Lee, Wan Bom

Starting from the streets in spring of 1960 and continuing on to spring of 1980, June of 1987, to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 and 2017, the revolution spanning over 50 years, albeit intermittent, consistently pursued democratization. The more than 50 years of revol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or rather, the 60-year revolution, as street protests are still ongoing as of 2020—can be defined as an intermittent-yet-successive revolution by the unorganized Minjung aspiring towards democracy. From April Revolution to the 86-generation and to the candlelight protests, the long revolution transcended generations. The present paper moves beyond previous studies that tend to examine individual protests separately and attempts to look at the revolutions of contemporary South Korea as a whole.

With the exceptions of spring of 1960 and the Gwangju uprising, the 60-year revolution for democratizatio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led by the unorganized Minjung has mostly been nonviolent and peaceful.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volutions of contemporary South Korea are distinct in being unorganized, nonviolent, and intermittent-yet-successive.